

미군철수와 한반도 비핵중립화의 정치학

- 셀리그 해리슨(Selig Harrison)의 경우 -

장 원 석*

目	次
I. 머리 말	3. 러시아
II. 북한체제의 지속가능성과 연방제 통일안	IV. 미국의 한반도 정책 비판
1. 북한체제의 지속가능성	1. 미국의 국익 재해석
2. 북한정권과 평화	2. 잘못된 시나리오
3. 연방제 통일안	3. 1994년의 기본합의와 페리보고서 평가
III. 주변국가의 한반도 정책 분석	V. 미군철수 및 한반도 비핵중립화의 제안
1. 일본	VI. 맺는 말
2. 중국	

I. 머리 말

남북관계의 논의에 있어서 미래 예측과 평가 기준의 차이는 상이한 정책 대안의 제시로 이어지며, 우리는 이러한 몇 개의 변수를 조합하여 분석의 모형을 유형화할 수 있다. 이 글은 북한체제의 존속을 예측한 후, 미국의 국익에 근거하여, 미군철수 한반도 비핵중립화론을 주장하는 미국 중견 언론인의 논리를 검토해 보려 한다.

셀리그 해리슨은 2002년 출간된 자신의 저서¹⁾에서 한반도의 사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미국이 무엇인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부시의 악의 축 발언 이후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사찰 요구가 거세어지는 시점에서, 이것

* 제주대학교 정외과

1) Selig S. Harrison, *Korean Endgame : A Strategy for Reunification and U.S. Disengagement*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은 잘못된 전략이며, 반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원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해리슨의 주장은 같은 시점에서 “공은 북측으로 건너갔으며 이제 북측의 성의있는 반응이 요구되는 단계”라고 말하는 다른 동료 전문가의 견해²⁾와 명백한 대조를 이룬다. 해리슨에 의하면 미국의 국익을 냉철히 고려할 때 미국의 최종적인 선택은 미군의 한반도 철수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의 포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는 1965년의 인도-파키스탄 전쟁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조기경보의 대가로서 명성을 얻었으며, 미하원 아태소위원회 위원장인 스테픈 솔라즈(Stephen Solarz)는 청문회에서 그의 지적, 도덕적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예언자(prophet)라고 칭찬을 하기도 하였다.³⁾

해리슨은 현재 국제정책센터(the 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의 국가안보 프로그램 책임자이며,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의 선임연구원이고, 센츄리 재단(the Century Foundation)의 미국의 한반도 정책 프로젝트 책임자이다. 그는 워싱턴포스트지의 아시아 지부장(1962-1972), 카네기 재단의 선임연구원(1974-1996)을 역임했으며, 주로 인도, 파키스탄, 중국, 일본, 한국 등을 취재해왔다. 1972년에 한국전 이후 북한을 방문한 최초의 미국인으로 김일성과 면담을 가졌으며, 1992년 방북 당시 북한의 플루토늄 처리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1994년 핵위기 당시 김일성과의 면담을 통해 북미 기본합의 체결과정에도 관여하였다. 그는 미 의회와 국무성, 국방대학 등에서 특강을 하고 있으며, 존스 홉킨스 대학, 조지 워싱턴 대학 등에도 출강하고 있다.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즈』,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등에 기고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종 텔레비전 시사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있다.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는 자신의 저서에서 해리슨을 몇 안 되는 양심적인 한국문제 전문가 중의 한 사람으로 거명한 바 있다.⁴⁾

II. 북한체제의 지속가능성과 연방제 통일안

1. 북한체제의 지속가능성

해리슨에 의하면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한체제의 붕괴를 예측하고 대비책 마련에

2) Scott Snyder, "is the US Really an Obstacle to inter-Korean Dialogue," *Pacific Forum* (May 25, 2001).<http://www.csis.org/pacfor/pac0121.htm>

3) <http://www.ciponline.org/NationalSecurity/SeligBio/htm>

4) Bruce Cumings, *Parallax Vision : Making Sense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 at the End of the Century* (Durham N. C. : Duke University Press, 1999), p. 149.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혹자는 시간이 지연될수록 사후처리 비용도 급격히 증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리슨은 이것을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한다. 그는 마르쿠스 놀랑(Marcus Noland)의 개념을 원용하여 북한체제의 앞날을 전망하는데, 그것은 “경제적 시련이 곧 정치적 파국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개혁과 붕괴의 중간에서 현상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른바 루마니아(Romania)식 현상유지(muddling through)모델이다. (Harrison, p.26) 그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전체주의적 지배구조, 민족주의 및 유교의 전통과 결합된 특유의 정치문화(주체사상)와 같은 일반적인 논리를 우선 열거한다. 풍부한 지하자원도 북한의 기사회생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그가 본격적으로 강조하려는 내용은 다른 곳에 있다. 그것은 북한이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그는 김정일의 리더십에 주목한다. 해리슨에 의하면 김정일은 매우 합리적인 인물이며 개혁지향적인 인물이다. 심지어 김정일은 미국에 대한 해묵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김정일은 지금 자가당착에 빠진 북한 체제를 구원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방수와도 같다. 그는 노동당을 충분히 장악하지 못하게 되자 군부의 힘을 빌려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고 있다. 해리슨은 오진우와 최광 등 빨치산 세대의 지도부가 사망함으로써 김정일의 군통제가 훨씬 용이해졌다고 본다. 김정일은 1998년 신헌법을 도입하여 당정을 분리시키고 군부에 대해 최고기관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개혁작업을 위한 사전작업을 완료하였다. 해리슨은 김대중 대통령의 입을 빌어 이러한 변화를 소련과 중국의 개혁 1단계 조치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한다.(p.38) 그 다음으로 해리슨이 강조하는 내용은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상징되는 개방을 향한 대약진이다. 해리슨은 김정일에 의해 추진된 일련의 개혁과정을 ‘은밀한’ 개혁(reform by stealth)이라 부르고 있다. 형용사의 의미는 보수 세력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회피하면서 추진되었다는 뜻에서이다. 경제적 자유화에 초점을 맞춘 은밀한 개혁 중에서 특히 해리슨이 주목하는 부분은 ‘제2경제’(second economy)와 ‘농산물 시장’(farmer’s market)의 출현이다. 처음에 금괴수출 업무로부터 시작한 김정일 직속의 대외교역사업은 이제 군부의 실력자인 조명록의 지휘하에 광범위한 수출망을 구축하고 식량에서 군수품에 이르기까지 종합상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지도부는 경제개발의 과실을 군부에게 일정지분 할애하는 중국,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모델을 수용하여 북한 경제의 활성화와 사적인 이윤추구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해리슨은 또한 1995년과 1996년의 기아사태가 체제의 붕괴를 재촉했다기보다 체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분석한다. 과거 비공식으로 존재하였던 극소수의 농산물 시장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어, 수많은 행상들이 도시의 주요 도로와 길가에서 과일로부터 가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직접 생산한 물건들은 공개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해리슨에 의하면 김정일은 인민의 처절한 생존투쟁을 방해하지 않기로 결심했으며, 북한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이동구는 김일성 대학 신문에서 이들 시장을 잘 활용하

여 생산성의 증가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p.41) 물론 해리슨은 당 관료집단의 부패, 신흥부호계층의 등장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등 체제개혁과 개방에 따른 위기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

2. 북한정권과 평화

해리슨은 북한이 이미 남조선 해방의 목표를 포기했으며,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고 있다고 본다. 해리슨은 그 이유로써 세 가지를 들고 있다. 그것은 첫째, 냉전의 종식으로 모스크바와 북경이 한반도 사태에 군사적 개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 둘째, 경제난으로 인한 군사력 약화로 지구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점, 셋째, 지난 30년 동안 북한의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남한이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기술적으로 우월한 군사력과 방위산업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군의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전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p. x xi) 더구나 평양은 현재 경제난으로 인하여 군비축소가 불가피한 시점이며 협상여하에 따라 서는 남한과 달리 큰 폭의 군사력 축소를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북한 군대의 전진배치나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리슨은 흡수통일의 공포에 사로잡힌 북한의 자기방어적 본능이라는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략핵무기를 철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이유는 첫째, 미국이 핵무기에 의한 선제공격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둘째, 한반도 주둔 미군의 존재를 북한의 생존에 대한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셋째, 핵무기가 고성능의 재래식 무기보다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의 경우 그것은 일본에 대해서는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함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자기방어용이라고 보아야 한다.(p.283) 해리슨은 또한 북한의 원자력 개발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것은 본래 에너지 수요의 필요에 의해서 착수되었으며 서울과 동경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북한주민들에게는 근대성의 상징이 된다.(p.265)

해리슨은 만일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의 패퇴가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압도적인 공군력과 정보력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리슨은 북한이 쉽게 점령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설령 정규군이 항복하더라도 고도로 의식화된 북한의 주민과 일부 군대가 게릴라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많다.(p.128) 따라서 해리슨은 북한의 침공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제한적인 기습전이나 생화학전 역시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는 북한에 의한 위협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은 자기패배적이라고 말한다.(p.131) 만일 미국의 지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남북이 군사대결을 벌인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해리슨은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남한이 자신의 안보를 수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한다.(p.135). 그는 그 이유로서 북한의 두 배에 달하는 군복무가능연령의 남성 숫자 과 청년집단의 인구구성비율, 그리고 미국의 경쟁대상으로 성장한 남한의 강력한 방위산업 수준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해리슨은 “남한은 이제 북한 이외의 잠재적 적국을 가정하는 전방위체계 수립단계에 돌입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특파원의 기사를 인용한다.(p.184)

3. 연방제 통일안

북한은 붕괴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두 개의 가정은 자연스럽게 연방제 통일의 논리로 귀결된다. 북한은 본래 통일의 잠정적 단계로서 연방제를 구상하였으며 단일화된 군대와 외교를 전제로 하는 통합적 연방제 모델을 제안해 왔다. 그러나 현재 평양정권은 연방제를 과도기적 단계가 아닌 최종적 단계로 간주하고 있으며 양측이 독자적인 군대와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느슨한 연합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평양은 향후의 전망에 대해 확신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연방제 논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p.74) 남한의 경우 통일문제에 대해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흡수통일론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통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연방제의 논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과거부터 일관성 있게 연방제 통일론을 주장해왔던 김대중 대통령은 국내의 보수세력에 의해서 발목을 잡히고 있는 상태이지만 통일은 시간문제이며 현재로서는 경제적인 준비작업을 해야할 때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해리슨에 의하면 연방제의 출범은 남과 북에 모두에게 커다란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북한은 체제공존의 제도화조치에 의해서 흡수통일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며, 남한은 궁극적인 통일의 희망을 간직한 상태에서 적당한 시기가 올 때까지 공식적 통합의 논의를 연기할 수 있는 정당화의 논리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p.100)

해리슨은 느슨한 국가연합으로서 연방제가 통일한국에 이르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예상한다. 북한이 시장지향적 개혁을 성공시켜 경제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적 간격이 좁혀질 것이며 북한의 지배엘리트들은 통일에 의한 신분위협을 덜 느끼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인종적이며 언어적인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1300여년 통일국가의 역사는 남북한 주민 모두의 머릿속 깊이 각인되어 있다. 일단 연방제가 뿌리를 내리면 에릭 에릭슨(Erik H. Erikson)이 말했던 집단적 정체성이 한국의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여 통일의 과정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다.(p. 72)

결국 연방제의 실현여부는 북한이 경제적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북한의 경제적 안정은 남한과의 교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남한의 흡수통일론을 불식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적 안정은 미국의 역할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조치를 철회하여 남한의 회사가 제조한 북한 상품이 미국시장에 상륙할 수 있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기타 국제사회의 원조기구가 북한을 지원하기 시작할 때 북한의 경제는 비로소 정상궤도 진입이 가능하다.

Ⅲ. 주변국가의 한반도 정책 분석

1. 일본

해리슨은 일본의 한반도 정책이 일관성이나 국민적 합의가 없으며 대체적으로 기회주의적(opportunistic)이라고 본다. 그것은 국내정치세력의 판도나 미국의 압력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왔다. 유일한 합의는 자국이 떠맡게 될 경제적이며 군사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p.301) 일본은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원하나 북한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이다.

한국전쟁 이후 일본은 서울과 동경의 군사협력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다. 일본은 오히려 워싱턴의 경고 속에서도 북한을 사악한 존재로 간주하지 않았으며 두 개의 한국정책을 고수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제2의 내전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한반도사태 개입은 중국 및 소련과의 충돌, 대규모의 난민사태와 엄청난 규모의 전후 복구비용 부담, 미군의 후방기지로써 공격의 목표가 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1993년 선거에서 좌파세력이 패배하고 1994년의 핵사태가 발생하자 양상은 역전되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원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일본은 경수로 건설이나 식량원조에 있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988년의 서울 올림픽으로 인하여 남과 북의 이미지는 차별화 되었으며 1998년의 미사일사태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었다.

일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북한이 개혁이나 붕괴 여부에 관계없이 시장경제체제로 나아갈 것으로 믿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 사태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해리슨이 인용하는 마사오 오코노기(Masao Okonogi)에 의하면 일본은 북한체제의 급격한 붕괴나 내전의 발발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점진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의 통일을 지지하고 있다.(pp.302-303) 그러나 해리슨은 일본이 북한의 연착륙에 협조를 한다고 할지라도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정도의 충분한 경제원조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일본은 자신을 추방한 미국이 한반도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지지한다.

그러나 해리슨에 의하면 일본은 두 가지 이유에서 통일한국을 두려워하고 있다. 첫째는 통일 한국의 핵무장 능력이다. 일본의 지도부는 일반 대중과는 달리 북측의 핵도발이 핵박용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오히려 남한의 잠재적 핵개발 능력에 대해서 더 긴

장하고 있다.(p.353)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여부와 관계없이 핵위협을 예견하고 있으며 통일이 되면 그것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남북한의 핵무기 개발 경쟁은 일본 핵무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둘째는 통일한국이 중국과 더불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동맹을 맺는 시나리오이다. 양국은 뿌리깊은 반일감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95년 장쩌민과 김영삼은 공동성명을 통해서 일본의 과거사를 비판한 바 있으며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우려하고 있다.(pp.304-305)

2. 중국

중국은 한국전 이후 북한과 긴밀한 유대를 유지해왔으며 한반도에서 특정국가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중국은 특히 중소분쟁의 시기에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북한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소련 붕괴 이후 북한의 줄다리기를 외교 압력에서 해방되었으며 경제적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한 결과 한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호전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영향력 유지를 원하고 있으며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가 초래할 정치적 불안정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 한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 경제원조는 과거와 달리 시장가격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거래관계의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당국에 대해서 중국식 경제개혁 모델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적 사정에서 비롯된 중국의 곡물 지원 중단은 1995년과 1996년 북한의 식량위기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해리슨에 의하면 한반도가 평화로운 과정을 통해서 통일이 되고 통일한국이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한 중국은 사회주의 맹방의 체제유지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다.(p.322-324) 중국은 통일한국이 굳이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양국간의 역사적 유대나 일본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반일감정 때문에 자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리라고 기대한다. 해리슨은 한반도에서 한국이나 미국 측에 의해 전쟁이 발발하거나 중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사태가 아니라면 중국은 북한체제의 붕괴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p.322) 그러나 주한미군의 문제와 관련하여 해리슨은 중국이 미군의 지속적인 한반도 주둔을 묵시적으로 양해할 것이라는 판단은 오류라고 말한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 이전의 단계에서 사태의 급격한 변화를 우려하여 미군의 점진적인 철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통일한국에서의 미군의 존재를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할 것이며 이 문제는 양국간 심각한 갈등요인이 될 것이다.(p.327) 해리슨은 또한 미군철수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개입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반박한다. 해리슨에 의하면 통일 한국의 민족주의 정서는 중국의 군사개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적인 경험에 미루어 볼 때 중국 역시 한국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pp.306-307) 해리슨

은 자신이 제안하는 동북아 비핵지대의 협정과 관련하여 북경이 대만에 대한 군사전략의 문제를 이유로 이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만일 미국이 대만에 대한 후견적인 태도를 포기하고 미일의 방위전략이 대만을 대상영역에서 제외한다면 협상은 가능하다.(p.276)

3. 러시아

북한정권은 메이드 인(made-in) 러시아 체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전 이후 소련은 평양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상실하였다. 닉슨이 지적했듯이 북한은 모스크바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자립적 체제를 구축하였다.(p.234) 중소분쟁이 진행되면서 소련과 평양의 관계는 다소 호전되기도 하였으나 엘친 시대에 와서 이 모든 것이 백지화되었다. 그러나 푸틴은 경제적이며 전략적인 이유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다. 푸틴은 2000년 김정일과의 공동성명을 통해서 양국이 안보상의 위협을 받을 경우 지체없이 접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2001년에는 현금거래를 전제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방어용 무기 부품 공급에 동의하였다. 러시아의 경제적 이해는 주로 서울에 집중되고 있으나 시베리아 천연가스개발이나 시베리아 횡단 철도개발과 같은 주요 사업은 북한의 협조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미국은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를 주변화시키는(marginalizing)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소련이 사실상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가입을 유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1994년의 기본합의 과정에서 배제되었으며, 케도(KEDO)의 콘소시움 참여 역시 거부되었다. 물론 명분은 러시아가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북한이 요구한 러시아형 경수로 건설의 요청도 미국에 의해서 기각되었다. 이즈베스티아(Izvestia)는 이를 두고 러시아가 아시아의 핵시장에서 축출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러시아는 또한 휴전협정을 영속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하기 위한 4자 회담의 제안에서도 배제되었다. 한반도 분단과정의 당사자로서 러시아는 일본을 포함한 6자 회담을 제안하여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희망하였으나 이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러시아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황에 와있다.(p.354) 해리슨에 의하면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입장이 다소 모호한 북경이나 동경과 달리 모스크바는 그것이 소련의 이익과 일치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p.354) 러시아는 연방제로 시작되는 점진적인 통일을 예상하고 있으며 미군의 단계적인 철수를 원하고 있다. 해리슨은 러시아를 지나치게 고립시키는 것은 러시아의 반미감정을 자극할 것이며 결코 미국의 국익에 이롭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러시아의 핵보유능력을 감안한다면 한반도 문제해결에 러시아의 역할은 필수적일 것이다.

IV. 미국의 한반도 정책 비판

1. 미국의 국익 재해석

미국은 냉전의 시기에 균형자 혹은 안정자로서 동아시아의 안정을 모색해 왔다. 한반도의 분단은 한국 국민들에게는 비극이었지만 이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균형은 미국의 국익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상황은 크게 변화하였다. 러시아와 중국은 남한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강화된 남북한의 민족주의 때문에 더 이상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북한은 이미 남조선 해방의 목표를 포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험이 상존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북한이 여전히 주한미군의 존재와 미국의 핵우산정책을 자신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핵무기와 미사일개발이라는 자구책을 강구하기 때문이다. 해리슨에 의하면 북한의 위기의식은 1994년의 합의에 대한 미국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하여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일본 우파세력의 핵무장론을 자극할 것이며 이것은 다시 남한 매파세력의 핵무기 개발 주장을 촉발하는 3국간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p.283) 이 과정에서 미국은 1994년의 위기 때처럼 예의 선제공격을 취할 위험이 있다. 로버트 갈루치(Robert Gallucci)는 이 당시의 상황을 『8월의 포화』에서 묘사된 1914년 여름을 회상시킨다고 회고하였다.(p.122) 이 책에 의하면 세계제1차대전은 오해와 부주의에서 비롯되었다. 해리슨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미국은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남한에 대한 편들기 정책을 포기하고 선량한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중립화시키는 일이다. 해리슨은 탈냉전 시대에 있어서 미국의 국익은 한반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데 있다고 본다. 해리슨이 주장하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주한미군철수의 감행이다. 과거 주한미군의 존재는 남측의 경거망동을 견제하고 북측의 무력도발을 방지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 균형을 유지한다는 명분을 취해왔으나, 최근에는 급부상하는 중국의 힘을 억제하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처한다는 논리가 추가되고 있다. 그러나 해리슨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예기치 않은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이기도 하다. 미국은 동아시아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할 시점에 와있다. 여기서 해리슨은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와 관련하여 남한측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난한다.

해리슨에 의하면 남한은 주한미군의 역할에 힘입어 한정된 자원을 경제발전에 활용함으로써 고도성장을 구가하게 되었으나 미국에 의존하는 타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인 평화구축의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 남한의 보수 중산세력은 미군 철수로 인해 야기될 국가적

인 부담을 우려하여 현상유지를 지지한다. 전 주한 미대사인 제임스 래니(James Laney)는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남한 정부의 국방비부담이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p.183) 해리슨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빼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변화를 거부하는 남한 정부의 집요한 로비와 이에 동조하는 국방성의 일부세력,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방위산업자들의 존재를 지적하고 있다. 주한미군으로 근무했던 미군 고위장교들도 이들 집단에 가세한다. 한국은 미국의 4성장군이 로마의 총독처럼 거의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최후의 영지이다.(p.182) 이 점에 있어서는 미군과 더불어 각종의 특혜를 공유하는 한국의 군 엘리트들도 마찬가지이다.

왜 1만 5천명의 미군병력이 북한의 침공예상자인 문산이나 철원에 전진배치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미군의 치명적인 인명손실이 미국의 자동적인 군사개입을 유도할 것이라는 정치적인 판단에서이다.(p.133) 미국은 남한측의 경거망동을 우려하여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통제하고 있지만, 서울은 작전권 이양이 미군철수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여 사실상의 주권침해를 감수하고 있다. 해리슨이 볼 때 주한미군의 존재는 남한 정부의 인질에 불과하다.

그러나 해리슨은 고조되는 한국 민족주의의 정서로 인하여 결국 미군철수가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본다. 기지촌 문제, 소파(SOFA), 방위비 분담 등의 문제가 거론되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남한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1999년에 랜드(Rand) 연구소가 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자의 17.7%만이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32%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마찬가지로 1999년 시카고 회의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 침략할 경우 미군을 투입해야 할 것인가의 물음에 응답자의 66%가 반대하였다. (p.188-189) 따라서 해리슨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아무런 소득없이 한반도로부터 철수를 강요받게 되는 상황이다.(p.115)

따라서 해리슨은 1975년 키신저(Kissinger)의 상해성명(Shanghai communiqué)을 언급하며 미군철수와 더불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주장한다.(p.173) 해리슨이 제안하는 미군철수론은 무조건적이며 즉각적인 철수가 아닌 군비축소와 연계된 단계적인 철수이며 미군은 일정기간 선량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북한도 즉각적인 미군철수가 초래할지 모르는 일본의 재무장 사태를 우려하여 과거와 달리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해리슨은 북한이 미국의 새로운 정책을 수용할 것으로 본다. 문제는 남한이다. 남한은 미군철수에 따른 전력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무리한 군사비 증액을 감행할 것인지 혹은 북한과 군비축소 협상에 착수할 것인지의 힘든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p.110) 혹자는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 당시 박정희의 반응을 회상하며 남한이 군비증강으로 나아갈지 모른다고 우려를 하지만 해리슨은 이 점에 낙관적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주변 상황이 크게 변화했을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양보를 요구한다는 근본적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만일 남한 정부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해리슨은 워싱턴 당국이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을 주문한다. 첫째, 남북 양측에 대해서 상호군축을 제안하고 만일 남한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대북협상을 강행해야 한다.(p.192) 둘째,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대가로 남한의 군비증강에 협조하거나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p.176) 셋째, 남한에 대한 미사일 및 우주계획 등 군사무기와 기술 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p. 256) 미군철수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본다.

2. 잘못된 시나리오

해리슨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몇 가지 의심스러운 가정에 대해서 언급한다. 첫째, 미군철수는 한반도에서 힘의 공백을 초래함으로써 1894년이나 1905년의 시기와 같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주변국가들이 지배력의 확보를 위해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이다. 해리슨은 이러한 주장이 남북한 양쪽에서 성장한 한국민족주의의 저력을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한다. 통일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더 이상 약소국가 아니며 외세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을 것이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통일은 독자적인 핵무장국가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p.348) 또한 1세기 전과는 달리 중국과 일본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국가도 군사적 대결의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해리슨은 통일이 중립화될 경우 주변국가들은 이러한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한다.

둘째, 핵우산정책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한일간 핵군비경쟁의 위험을 제거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미국은 1991년 남한으로부터 전략핵무기를 철수했지만 유사시 선제공격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태평양에 핵잠수함을 계속 배치하고 있다. 해리슨에 의하면 핵우산정책이 폐기되지 않는 한 북한은 미국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핵 프로그램 개발에 계속 몰두할 것이며, 이것은 남한과 일본의 대파 세력들을 자극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삼자간의 상호불신관계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다. 해리슨에 의하면 한일 양국은 미국이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핵우산정책에 의한 핵군비경쟁 방지는 실효성이 없다.(p.353) 따라서 해리슨에 의하면 한일간 핵군비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북한 양측을 포함한 모든 주변국가가 한반도 내에서의 핵무기 배치와 사용을 금지하는 비핵지역 선언을 하는 것이다.

셋째, 한미일 동맹에 대한 믿음이다. 1996년 랜드 연구소는 서울, 동경, 워싱턴을 연결시키는 지역안보체제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해리슨에 의하면 일본의 여론은 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미일 동맹의 완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 한국 역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아픈 기억으로 인하여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은 정치

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 또한 중국이 이러한 동맹을 자신에 대한 봉쇄정책으로 간주함으로써 사태가 악화될 것이다.(p.350) 국가안보기구의 책임자였던 윌리엄 오돔(William Odom) 역시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미일 3국의 협상을 주장한 바 있다. 오돔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전제로 동경은 서울에 대해서 충분한 통일비용을 지원하고 한국은 모든 핵무기 개발을 중지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해리슨에 의하면 일본은 한반도 재건의 통일비용을 떠맡지도 않겠거니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이 이것을 자신에 대한 봉쇄전략으로 간주하여 긴장이 조성될 것이며, 일본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 역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p.353)

3. 1994년의 기본합의와 페리보고서 평가

해리슨은 전술한 논리에 입각하여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구체적 사례로서 1994년의 기본합의와 1999년의 페리보고서를 거론한다. 해리슨에 의하면 1994년 10월의 기본합의는 기본적으로 성공적인 문제 해결의 사례이다. 김정일이 이끄는 북한의 실용주의 세력은 미국의 고압주의와 국내 강경파의 반발을 극복하고 타협안을 이끌어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북한외교의 승리이다.(p.220). 그러나 미국으로 볼 때도 그것은 성공사례이다. 인도의 경우와 달리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데 성공하였다. 거대국가로서 인도가 보여준 자신감과 달리 북한은 생존을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해리슨은 기본합의가 본질적으로 불평등조약이라고 본다.(258) 그 이유는 미국 자신은 동아시아에서 자유롭게 핵무기를 운용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핵시설 해체를 요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리슨은 이 문제를 일단 접어두고 미국이 과연 기본합의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문제 삼는다. 해리슨에 의하면 평양의 핵시설 해체와 국제 원자력기구의 핵사찰 수용은 합의서에 규정된 미국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다. 미국의 의무는 무엇인가? 첫째는 경수로 건설의 의무이다. 기본합의는 핵사찰 시점을 규정함에 있어서 경수로 건설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리슨에 의하면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정권의 붕괴를 예상하여 처음부터 지연전술로 일관하였으며 이는 북한의 의구심을 자극하였다.(p.4) 현재의 상태로 경수로 건설이 진행된다면 예정일인 2003년은커녕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2015년 이전에는 완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p.259). 제2의 체르노빌(chenobyl) 사태를 우려하는 일본 정부도 경수로 건설에 소극적이며, 다만 통일한국의 미래를 예상하는 남한 정부만이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해리슨에 의하면 미국 정부의 핵사찰 주장은 1994년 합의문 내용의 한계를 이탈하고 있다. 여기서 해리슨은 타협책을 제시한다. 그것은 경수로 건설의 진척상황과 발을 맞추어 점진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리슨에 의하면 보다 중요한 사안은 합의문 3조1항에 규정된 미국의 핵무기 사용 위협으로부터 북한의 안전을 공식적으로 확인

하는 문제이다.(p.258) 해리슨은 이를 위해 미국에 의한 선제 공격의 포기가 선언되어야 하며 후술하는 것처럼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사용·배치·제조를 금지하는 비핵지대 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로서 미국은 선제공격의 포기선언이 미국의 군사작전을 제약하는 위협한 전례가 될 것으로 보고 이 문제의 논의를 금기시하고 있다. 해리슨은 이외에도 경수로 건설 지연으로 인한 북한의 에너지 부족을 보상하기 위해서 미국이 에너지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요구를 협박이라고 일축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남한 정부의 에너지 지원정책을 중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리슨은 여러 가지 난관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발전소를 비핵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한 기본합의의 재협상 문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것 역시 쉬운 작업이 아니며 미국정부는 본래의 약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p.266)

“그들은 왜 미사일 프로그램을 원하는가? 그 주된 이유는 안전과 방어이다.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자신이 북한에 대해서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우리를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있음을 완전히 믿는다.”(p.114) 이것은 페리가 짐 레러(Jim Lehrer)와의 방송 대담에서 한 이야기이다. 해리슨은 여기서 인용한 것처럼 페리가 북한 정권의 의식세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해리슨은 페리가 그것을 자신의 정책제안에 반영하지 못했음을 비판한다. 페리는 북미관계 정상화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평양이 미사일의 요격 거리를 180마일로 제한하는 것이고, 둘째는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리슨에 의하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과 그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후자는 북미간의 적대관계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경제적 유인과 정치적 승인만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페리의 가정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p.113). 북한은 관계개선의 선결과제로서 미군철수의 주장 대신 미군의 역할 변경 - 적대적 역할의 중지 - 을 요구하고 있다. 어느 편의 주장이 더 타당한가? 해리슨에 의하면 한국전의 공식적인 종결을 선언하는 평화협상의 체결과 주한 미군의 역할 변화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며 따라서 상호신뢰 및 긴장완화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논리이다.(p.114) 페리는 협상 당사자의 모든 관심사를 의제로 상정하는 일괄교섭(package deal) 방식을 거부하고 소위 말하는 이중경로(two-path)전략으로 협상과정을 통제하려 하였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폐기한다면 미국은 관계를 정상화하고 제재완화조치를 취하겠지만, 첫 번째 선택을 거부하는 경우 미국은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책이다. 해리슨은 주한미국대사 보스워즈(Stephen Bosworth)의 말을 인용하여 미국의 일괄교섭 방식을 거부하는 이유는 미군의 지위변화에 관한 논의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p.172) 해리슨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은 페리보고서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V. 미군철수 및 한반도 비핵중립화의 제안

논리적으로 볼 때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조치는 군사정전위원회를 북한이 제안하는 3국안보위원회(남한, 북한, 미국)로 대체하는 일이다. 동시에 1991년 합의했으나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들 상호 연관된 두 개의 조치가 완료되면, 미국은 휴전협정을 평화조약(미국, 중국, 북한)으로 대체하고, 1991년의 기본합의서를 강화하는 남북평화협정을 추진하며 유엔사령부를 해체한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합의를 유엔안보리에 상정하여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결을 선언한다. 유엔은 유엔사령부의 해체를 공식적으로 승인한다. 이것으로 군비축소와 긴장완화에 대한 협상을 위한 기본장치가 완료된다.(p.190)

3국안보위원회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우선 전진배치된 북한군 공격용 무기 - 중포 및 기갑부대, 로켓포 등 - 의 철수를 논의한다. 미군과 남한의 군대 역시 전진배치를 해제해야 하는데 서울의 위치를 고려할 때 북한군의 철수거리가 더 길어야 할 것이다. 비대칭적인 부대철수에 대한 보상으로서 워싱턴과 서울은 평양이 공격용 무기로 간주하는 아파치 헬기와 같은 무기체계를 제거하고 미군 지상군과 공군의 일부를 철수시킬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의 군사지도자들은 북한의 군대재배치를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첫째, 북한군 포병의 배치를 공개하도록 하여 이상유무를 점검할 수 있게 하고, 둘째, 미국은 지휘 및 통제, 목표조건, 정보지원 등을 위한 시설들을 계속 유지한다. 한미안보조약이 이 단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므로 미국은 유사시 미군을 복귀시킬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p.191)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분적인 미군철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잔류 미군의 성격을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존재로부터 성실한 중재자로 전환시켜야 한다. 북한은 이 경우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근래에 밝혀왔다. 해리슨에 의하면 북한은 주한미군의 성격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지 않는 한 자기방어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군의 단계적 철수는 10년 이내의 기간 속에 완료되어야 한다.(p.192)

일단 군비통제의 과정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미국은 남한과의 군사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 한미연합사령부를 주일미군의 지위와 유사한 형태, 즉 보다 대등한 관계구조로 전환시키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이양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상당한 정도의 긴장완화가 진척됨을 전제로 한다.

해리슨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남북한 양측의 강경론자들이 저항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물론 북측이 군비축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 가능하다. 그러나 해리슨에 의하면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강경한 태도로 일관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는 문제는 남한이라고 말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경제적인 압박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남한은 현상유지에 집착하여 협상에 해방을 놓을 수

있다. 해리슨은 이 경우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임해 미군철수를 비롯한 군비 통제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리슨은 군사협상과 병행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미국 정부는 제재조치를 보다 완화하고 대규모의 식량원조를 제공해야한다. 또한 북한을 테러주의 국가 명단에서 삭제하여 세계은행이나 기타 기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 역시 노동(Nodong) 미사일의 단계적 해체를 유도하고 북일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경제원조를 제공해야 한다.(p.283)

미국은 미군철수로 야기될 수 있는 불안정을 방지하고 군비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로 외국군대의 한반도 진입을 금지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4개국의 한반도 중립화 협정을 추진한다. 계속해서 미국은 남북한 정부를 포함한 6개국 정부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의 제조, 반입, 사용을 금지하는 한반도 비핵화협정을 체결한다. 이후 워싱턴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초월적 태도를 견지하여 단순히 조언만을 제공하는 제3자적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완충국가로서 통일한국의 잠재력과 민족주의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VI. 맺는 말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체제는 일부의 예측과 달리 붕괴하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나아갈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연방제의 단계에 이르러 한국민족주의에 의해서 가속화될 것이다.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한 북한의 위기의식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며 그들의 자구노력은 가령 핵무기 개발조차도 정당한 것이다. 남한은 미국의 희생 위에서 번영을 구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남북한 및 일본 상호간에 의구심의 악순환을 자극하여 동아시아의 안정을 파괴할 것이다. 해리슨이 강조하는 위기의 메카니즘은 위협수준에 대한 시각의 상호적 악순환을 군비경쟁과 결합시키는 리차드슨 모델(Richarson model)⁵⁾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위기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뇌관을 해체하는 일이다. 탈냉전 시대에 있어서 미국의 국익과 부합하는 새로운 한반도 정책은 단계적인 미군철수와 북한의 군비축소를 연계시킨 후 최종적으로 주변국가의 동의하에 한반도를 비핵중립지대로 선언하는 일이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남한 정부의 저항을 과감히 물리쳐야 할 것이다. 해리슨은 워싱턴 당국이 김대중과 김정일을 도와서 남북한 온건파의 입지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⁶⁾

해리슨 스스로가 주장하듯이 한반도 비핵중립화론은 기존의 시각을 뛰어넘는 논리이며

5) 구영록, 『인간과 전쟁 : 국제정치이론의 체계』 (법문사, 1977), pp.141-143

6) Selig Harrison, "Time to Leave?" *Foreign Affairs* (March/April 2001), p. 76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특히 북한의 위기의식을 심분 이해하려는 그의 노력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현재적 역할, 미군철수를 반대하는 집단에 대한 분석, 한국 민족주의 미래에 대한 단상 등도 마찬가지로 흥미를 끈다. 그렇지만 그의 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리슨의 주장은 북한체제의 존속에서부터 북한정권의 선의와 주변국가들의 반응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중의 어느 하나라도 부정될 경우 그의 결론은 적실성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북한의 체제개혁을 과대평가하고 북한사회의 앞날을 낙관하는 그의 분석에 대해서는 반론이 가능할 것이다.⁷⁾

둘째, 논증 방식의 문제이다. 해리슨은 자신의 개인적인 교분이나 일화를 너무 비중 높게 다루어 그것을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언론인으로서 관계당사국의 주요 행위자들과 많은 접촉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자료가 곧 국가정책의 실체라고 간주될 수는 없을 것이다. 가령 김일성이나 김정일과의 몇 마디 대화에 근거하여 북한 경제정책의 본질과 성과를 예단하는 것은 다소 위험스러운 논리이다.

셋째, 미국의 국익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해리슨은 북한에 대한 호감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해리슨은 미국의 위협에 대한 북한의 위기의식을 진실된 것으로 인정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한 남한의 위기의식에 대해서는 과장이라 평가한다. 해리슨의 주장은 절반의 진실에 대해서만 눈길을 보내고 있다.

넷째, 국익을 앞세운 해리슨의 정치현실주의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의 논리를 연상시킨다. 한국은 미국의 오랜 우방국가이다. 그러나 해리슨의 주장 속에는 우방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해리슨은 남북한의 정통성 경쟁에서 누가 승리하던지 그것은 관심사 밖이라는 태도를 취한다.

서울과 평양을 위해서 무대가 마련될 것이다.... 미국은 초연한 태도를 취하고 뒤로 물러나 두 당사자가 자기들끼리 시행착오를 범하는 것을 지켜보면 된다. 그것은 한국 민족주의와 통일한국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의 문제이다. (p.192-193)

마지막으로, 연방제와 통일의 관계가 모호하게 설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리슨은 연방제의 건설을 통해 남북체제가 상호 공존할 것을 제안하면서 주한미군이 최종적으로 통일한국에서 완전 철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느슨한 연방제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통일한국으로 이행될 것이라고 간단히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느슨한 연방제는 평화공존의 상태에 불과하지 통일을 반드시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해리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행하고 있지 않다.

7) 가령 에이단 포스터 카터에 의하면 "모든 길은 붕괴로 통한다." Aidan Foster-Carter, "North Korea : All Roads lead to Collapse - All the More Reason to Engage Pyongyang," in Marcus Noland (ed.),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ashington, D.C.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8).